

1장

반응형 세계화에서 성찰의 세계화로 _한국형 세계화론의 기원, 쟁점, 과제

장 훈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세계화는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의 연장이자 앞으로도 지속될 개혁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_김영삼 대통령

“G20을 통한 국제 공조로 세계화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 등의 노력 또한 배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_이명박 대통령 2010년 1월 다보스포럼 연설

서론 : 세계화를 다시 생각한다

한국의 대외관계는 세계질서의 구조 변동이 올 때마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정적 국면에서의 선택은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전, 사회적 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깥 세계에서 본격화되던 세계화론에 별다른 준비 없이 편승했던 김영삼 정부(1993-1998)의 선택은 불과 몇 년 후인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한편 1970년대 냉전체제의 한 가운데에서 추진된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아울러 정치적 억압의 강화를 초래했었다.

2008년의 세계 경제위기는 세계질서가 새로운 구조 모색을 위한 장기변동에 다시 한 번 돌입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다(Krugman 2008; Shiller 2008; Wolf 2008). 그동안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를 외치던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일부 금융산업의 실질적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의 축은 G7에서 G20으로 전환되고, 이 협의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미국 주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거대한 변동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여기에 선택을 좌우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적, 사상적 기반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중대 결정의 사회적 환경은 낙관적 자축과 냉소적 무관심으로 분열되어 있다. 2010년 하반기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신세계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무대로서의 G20 회의를 주최하게 된 국가로서의 위상과 독보적인 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래 선택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낙관론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세계적 질서 규범을 짜는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역사적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대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들은 대외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열 이외에도, '위기 이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일면적이고, 경제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예컨대 G20을 중심으로 위기 이후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은 '경제 이슈의 정치적 타결 과정'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경제 이슈에 치우쳐

있다. 또한 G20이라는 새로운 협의체는 한편으로 우리의 신장된 위상을 보여 주지만, 아울러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결정체이기도 하다. G20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주도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추구할 지에 대한 사회적, 이념적 합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전환기의 세계무대에서 우리는 나름의 대외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기회를 맞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을 효과적이고도 신중하게 구상하고 집행할 이념적·사회적·제도적 기반은 빈약한 상태이다.

빈약한 기반을 메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사로부터 배우기’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변방국가에서 G20의 주축국으로 올라선 경우는, 한국 이외에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지침이나 교범을 들여오기는 어렵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경험과 실패를 분석하고 되돌아보면서 이로부터 교훈과 지침을 만드는 일이다.

가장 최근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는 대외 이니셔티브는 김영삼 정부가 — 그리고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 추진한 ‘세계화정책’이었다.¹⁾ 1994년의 시드니 선언 이후에 본격화된 세계화 추진은 정부와 민간이 쏟아 부은 에너지와 시간의 차원에서 그리고 결과의 폭과 깊이에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중대 실험이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세계화정책의 정책적, 이념적, 정치적 기원과 그것이 수반한 정치적, 제도적, 이념적 쟁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1990년대 세계화정책의 기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첫째, 당시의 세계화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 기반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둘째, 전세계적인 세계화 흐름의 이념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주도적 세계화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흐름에 따르는 추종형 세계화로 귀결된 배경과 요인을 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1) 최근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박세일 교수는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 세계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세일(2010) 참조.

1기 세계화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의 대외전략을 이끌어 갈 세계화 전략으로서 성찰적 세계화의 조건들을 간략하게 논의하려 한다.

반응적, 제한적 세계화의 기원 : 김영삼 정부 세계화론의 리더십, 제도, 인식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던 중에 발표한 이른바 시드니 구상은 한국 대외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역과 금융으로부터 문화, 교육, 사회복지,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른바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세계화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한편으로 개방과 경쟁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 의식개혁, 관습의 개혁을 시도하고, 교육개혁, 공공부문의 개혁, 노사관계의 개혁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재고하고자 했다.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들의 인식 및 가치관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대외지향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하였다.²⁾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상당한 구체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완의 세계화론으로 끝나게 되었다. 애초의 세계화론이 기대했던 제도개혁, 의식개혁, 문화개혁의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세계화정책은 1997년의 국가부도 위기와 그에 뒤이은 IMF 구제금융상태로 귀결되었다. 단기의 채 중심의 대외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상태에서 대외신용도의 하락과 국제금융

2)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와 소개에 대해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1998)를 참조.

시장의 불안은 곧바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모범국의 지위로부터 태국,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아시아의 불안국가로 추락하였다. IMF는 대규모 지원과 더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경제, 금융 개혁조치를 한국 정부에 강제하게 되었고, 개방정책은 국제금융기구의 주문과 요구를 단순히 집행하는 처지로 격하되었다.³⁾

안으로의 개혁과 외부로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며 열정적으로 시작된 1기 세계화가 좌초한 까닭을 인식의 지체, 사회적 합의의 빈곤, 제도와 문화 사이의 갈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인식의 지체 : 세계화론의 이상과 현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이 중심부 선진 국가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지 약 10년 정도가 지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의 시점에서 세계화의 구조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심층적인 이해와 인식은 매우 일천한 것이었다. 이른바 미국의 레이거니즘과 영국의 대처리즘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전략과 이의 세계적 확산으로서의 세계화론의 이면에는 전 세계 경제구조의 전환, 중심부 국가들의 생존전략의 변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개방국가들의 위상 변화 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깊은 통찰보다는 새로운 세계 표준으로서의 세계화를 빨리 받아들이려는 열망과 의욕이 압도하였던 것이 초반 세계화 전략의 특징적 한계였다.⁴⁾

3) 한국과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는 문헌은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다. 국내외의 대표적 인 예로는 백광일·윤영관(1999)과 Goldstein(1998)이 있다.

4) 박길성(2008)은 최근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급격한 세계화 전략을 “열망적 세계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 흐름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1·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전 세계 경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주의를 구가했고, 무역과 금융질서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경쟁을 보여준 바 있다.⁵⁾ 그러나 이 같은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의 무한경쟁이 결국 주요 경제대국 사이의 양차 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판단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과 금융질서는 상당한 수준의 제약과 통제가 작용하는 제한적 자유주의로 이어졌다.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는 이른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가트)과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기축으로 형성되었다. 이 체제의 핵심은 상품과 자본, 노동력의 이동을 일정한 정도로 규제하는 제한적 자유주의 체제였다. 또한 이 같은 제한적 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최저를 보장하는 복지국가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심으로 케인즈 정책을 매개로 한 계급 타협 체제에 의해서 지탱되었다. 국제적 차원의 제한적 자유주의와 국내 차원의 케인즈 타협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2차 대전 이후 수 십 년간 전 세계적 안정이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안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주도력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의 안정기를 구가하던 제한적 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점차 개방과 경쟁이 강조되는 자유주의 질서가 다시 강화되는 변화의 물결이 도래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에서 자유주의의 강화는 전자기술 혁명에 따른 정보화 혁명과 결합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압축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빠르고 보다 가깝게 만드는 세계화를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이 무역과 금융, 특히 국

5)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한 논의로는 Hirst and Thomson(1999)이 있다.

6) 이를 포함한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개편을 위한 논의로는 백창재(1998), Ruggie(1982)를 참조.

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개방과 자율을 다시금 강화하고 나선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었다.⁶⁾

무엇보다 전후 금융질서를 이끌어온 고정환율제가 1970년대 중반에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던 데에는 미국 경제력의 후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정환율제를 지탱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와 미국이 보유하는 금의 가치를 연계하는 달러 금본위제였지만, 미국 경제력의 일시적인 후퇴로 인하여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베트남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하여 미국의 닉슨 정부는 마침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 포기 이후 금융시장은 서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자율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의 자유화를 적절하게 규제하거나 감독할만한 국제적인 감독체계는 쉽사리 갖춰지지 못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불사조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한 셈이다(Cohen 1996). 국제금융의 이동성이 늘어나면서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좌우되어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금융자유화라는 일차적 촉발과 더불어 미국과 영국의 신보수주의 정부는 정부 역할의 축소와 시장기제의 확대,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선진국들의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미국과 영국의 보수정부는 기존의 케인즈식 타협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신봉하는 이들 신보수 정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비판을 강화하면서, 도덕적이고도 효율적인 경제체제는 시장 중심의 체제라는 이념과 정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축소와 재편이 이루어지고 정부 개입 위주의 경

제정책 역시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 개입의 축소와 규제의 완화, 시장자율의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레이건과 대처 정부가 주도하기 시작한 신보수 혁명은 점차 주요 경제 선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1989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화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와의 대결이 끝나면서, 선진국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전파가 경제적 안정과 국제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유명한 선언처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역사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구사회주의권이나 주변부 국가들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에는 민주평화론, 다른 한편에는 세계화론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 중심의 주도국들의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과 세계화론이 반드시 이상적 질서를 향한 이상적인 구상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두 구상은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탈냉전과 시장경제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었다. 중심부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꾸어 온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의 확산을 통해 세계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냉전 이후 질서의 이념적, 사상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후발국, 주변국들과 제한 없는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세계와의 대결을 위해서 유지하던 후발국들과의 후견인-수혜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는 이제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고, 선진 및 후발국들이 모두 함께 경쟁하는 새로운 질서의 틀을 창출하는 셈이다.

1980년대 이후 워싱턴에서 발신하기 시작한 세계화론에 담긴 이 같은 이상론과 현실전략은 한국에게 이중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한국이 누리던 특별한 지위를 거의 상실하였음을 인

식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소련, 중국과 맞서는 냉전 대결의 최전선에 위치해있던 한국은 그동안 예외적인 혜택과 지위를 누려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데에 미국의 유무상 원조와 경제개발의 지원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전쟁 이후 불과 반세기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아시아의 용으로 성장한 데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수출시장, 기술 이전과 같은 특별한 대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 같은 특별한 지위의 기반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는 국제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냉전체제의 수혜국으로서의 혜택은 거의 사라졌고 국제적인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정글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세계화론 이전까지 우리는 냉전질서와 제한적 자유주의의 우등생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워싱턴발 세계화론의 이상과 현실 전략의 이중성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이 절실하였지만,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정책 엘리트들 내에서 충분히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하나의 중대한 인식의 지체가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체제 하에서 모범적인 성장과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으로서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의 번영과 평화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워싱턴이 강조하는 탈규제, 금융시장의 자유화, 정부 개입의 축소가 곧 한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여전히 믿었던 셈이다. 중심부 국가들이 강조하는 세계화 교범을 충실히 따르면, 자유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하고 추종적인 개방정책을 낳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종형 개방정책은 1997년의 심대한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단선

적인 인식의 한편에는 냉전시대에 미국 중심 질서의 수혜국으로서의 관성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향식 세계화 전략의 한계

시드니 구상과 그에 뒤이은 세계화 추진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의 세계화는 정부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주도된 국가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흐름과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한 주체도 정부였으며,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는 세계화 전략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세계화론의 확산을 주도한 것도 정부였다. 정부가 문제의 인식, 전략 수립,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하향식 세계화의 성격이 단순한 추종적 세계화를 낳은 또 다른 중대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부분적으로 민간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시드니 선언 이래로 광범한 지식인들이 세계화 논쟁에 뛰어들었지만, 세계화 추진의 핵심 주체는 정부였다.⁷⁾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 절차의 추진, 그와 연동된 금융시장의 급격한 개방, 그리고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에서도 추진 주체는 역시 정부였다.

정부 주도의 세계화 전략은 정부 - 시민사회 - 야당이 두루 참여하는 이른바 세계화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개방전략의 패자와 사회적 불만을 아우르는 세계화 협약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개방과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정부규제의 완화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개방화 전략은 필연적으로 개방화의 수혜자와 피해 집단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적 수준에서는 개방전략에

7) 주로 서구와 미국의 입장에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가 또 다른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로는 Kim(2000)을 들 수 있다.

반대하는 반(反)세계화 세력이 적지 않게 조직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OECD 가입과 연동되어 있던 농업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와 불안정을 불러오기에, 이들 농업 부문은 개방 위주의 세계화전략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게 마련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파견근로, 변형근로 등이 강화되면서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방전략의 피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예컨대 주요 선진국들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에서 벌어진 반세계화 시위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들도 있으며 또한 OECD 가입을 위한 농산물 개방이 정치쟁점화 되었을 때 농민단체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강렬한 반대와 저항을 꼽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해, 개방화 전략을 통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교육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강화되는 경쟁에 따른 사회적 피해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아울러 높아진다.

세계화 개방전략이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아울러 가져온다는 것은 곧 세계화 전략이 단지 경제개방 전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효과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세계화 전략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대외의존형 국가들인 유럽의 몇몇 중소국가들의 세계화 전략을 살펴보면 이 같은 세계화 전략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영조 1995).

1980년을 전후로 무역, 금융 등의 개방을 강조하는 세계화론이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게 되자, 유럽의 대외의존형 소국가들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이러한 표준에 저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스티븐 크래스너(Stephen Krasner)가 표현한 바와 같이 세계표준을 창출할 능력을 갖지 못한 이들로서는 세계표준의 적극적인 수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 무역 등의 자유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오는 정치적 효과를 관리하는 대내 보상과 관리에도 착수하였다. 이들 국가들

은 대외 개방정책이 국내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격차와 분열을 낳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정책에 착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들을 위한 투자준비금,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의 증진, 그리고 격차가 벌어지는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유럽 소국들은 경제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내적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한 셈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경쟁력 부문과 비경쟁력 부문이 공존하는 세계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1기 세계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엘리트 중심의 일방적 세계화에 간혀 있었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는 세계화전략을 추진하였지만, 실제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와 대화를 통한 세계화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발전국가의 특성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개방정책의 대내적, 부정적 효과를 관리하는 세계화의 정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강렬하게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액과 농업발전기금을 약속하였다. 농업 부문에 대한 보상금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뤄질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그에 따라서 총액은 거대한 규모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보상이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농민단체들이 대외개방의 전반적인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상 노력이 추구되어,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이른바 노사정 합의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서 대외개방의 피해집단으로 등장한 노동세력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였지만, 이러

한 노력이 정부와 노동단체 사이에 대외개방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결국 1기 세계화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세계화협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세계화는 사회적 합의라는 기반을 결여한 채 추진되었다.

시민사회의 이중 분열

1990년대 중반 단순 추종형 세계화 전략의 배경에는 비단 대외전략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정부의 실패만이 작용하였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실패만큼 폭넓은 주목과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시민사회의 실패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기 세계화가 단순한 인식과 정부 주도 하에서 하향식으로 흘러간 데에는 시민사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떠맡은 시민사회가 정부 주도의 세계화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데에는 세계화정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세계화 옹호 세력과 반세계화 세력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보수적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외개방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 주도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세계화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유통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보수 성향의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들은 세계화론에 대한 인식, 정책대안의 구상 등에서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화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대안적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달리 말해 1기 세계화가 추진될 때에 정부와 보수적 시민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세계화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진보적 시민사회 역시 정부 주도의 세계화정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체로 세계화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진보적 시민사

회는 내부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해 저항하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농민단체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은 세계화 개방정책에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개방정책에 따른 보상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세계화 흐름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화 흐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개방정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세계화 흐름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세력도 아울러 존재하였다. 문제는 진보 시민사회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드라이브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만한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입장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종합하자면, 보수적 시민사회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과 '비판적 거리 두기' 보다는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일방적 세계화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보적 시민사회 역시 반세계화론의 여러 갈래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세계화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단순 추종형 세계화 : 외환시장 개방의 사례⁸⁾

1997년 한국경제가 심대한 금융위기에 처하고 마침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역사적 충격을 겪게 되자, 위기의 일차적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 김영삼 정부 중반에 추진된 외환시장 개방의 성급함이었다. 당시의 세계적 흐름인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발맞추어, 김영삼 정부는 2004-2005년에 걸쳐서 빠르게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이 가져올 대내적 효과에 대

8) 이 부분의 논의는 장훈(2002) 참조.

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자본투자가 자유화되면서 해외의 단기 자본이 급속하게 출입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단기자본의 리스크를 통제할 감독 기구와 방식에 대한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제어할 만한 제도나 방식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달리 말해, 자본시장에 연계된 대내적 금융개혁과 관행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복합적인 인식'은 거의 작동하지 않은 채,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화 개혁의 일환으로서 자본시장 개방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자본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행사할 만한 조직적인 능력이나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본시장의 자유화 — 외국인외의 국내투자 자유화, 국내외 증권 발행의 자유화, 무역신용 및 차관 도입의 자유화 등 — 조치가 불과 몇 년 만에 1차 세계화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귀결된 배경을 세 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복합적 세계화 인식의 결여

자본시장 개방을 지휘하고 추진한 김영삼 대통령과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져오는 이중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빈약하였다. 이들 추진 주체들은 경제 부문 개방정책의 핵심으로서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개방이 가져오는 대내적 위험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숙고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단선적 인식의 출발은 세계화 드라이브의 핵심 목표로서 OECD 가입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서만 자본시장 자유화를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OECD 가입이 대내외적으로 세계화 드라이브의 상징으로 이해되면서, 자본시장 자유화는 경제선진국 클럽인 OECD가 요구하는 가입조건으로서만

이해되었을 뿐 그것이 수반하는 대내적 충격과 위험에 대한 경고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OECD는 국제적인 자본이동과 관련된 조치를 주관하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 CMIT)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IME)를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신경제 5개년 계획'(1993년)과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에 더해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의 자유화, 국내의 증권발행의 자유화 및 무역신용 및 차관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일방적인 자본시장 개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학계의 일부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의 선결 조건으로서 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 ② 무역자유화의 성숙, ③ 국내 금융산업의 수용태세의 정비, ④ 자본시장 개방에 앞선 금융개혁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김인준 1997). 그러나 이 같은 신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본시장 개방에서 대통령과 정부 내 개방세력의 정치적 주도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방적 자본시장 개방을 제어하면서 대안적이고 연계된 개혁을 강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역부족이었다.

대통령과 정부 주도 개혁의 배경과 한계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 구상에서 세계화를 제2의 개국 혹은 새로운 국가 도약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래로, 대외개방정책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프로젝트'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료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나 제어는 상당 부분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던 1994-1995년의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권력 자

원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저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나 그 밖의 국내 행위자들에게 이른바 규제권력을 행사해 오던 경제관료들이 처음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자본시장 개방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은 곧 이들이 시장행위자들에게 행사하고 있던 영향력의 후퇴를 의미하였기에, 경제관료의 상당수가 자본시장 개방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무렵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밖의 정치 환경 또한 대통령의 핵심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웠다.

먼저 경제관료들의 경우에, 민주화와 더불어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정부와 관료들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과거 발전국가 시대처럼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규제하고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정부와 관료들이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해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통치능력, 규제, 효율성 등이 키워드였다면, 민주화 이후 협치, 거버넌스라는 개념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정부 관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 행위자들과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이홍규·김병국 2006).

이른바 협치와 거버넌스론이 관료들의 역할 변화의 배경 요인이었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강한 정치적 자산은 관료들의 개방 반대를 무력화한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세계화 선언을 하던 시점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해당 하는 시기여서 대통령의 시간상의 자원은 비교적 강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선거주기 상으로 볼 때 선거가 곧 다가오는 것도 아니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주도력은 큰 정치적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 내의 여야 정당이나 관료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계화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곧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세계화정책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었다.

시민사회의 대안 제시 실패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는 시민사회는 김영삼 정부가 주도하는 신속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제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시민사회 내의 분열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요인이 아울러 작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 개방과 그에 수반하는 금융개혁이라는 이슈가 갖는 고도의 복잡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를 결집하는 이슈의 정치화가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제표준에 따른 빠른 시장개방과 대내충격을 고려하면서 천천히 추진하는 상반된 입장이 가능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 개방이라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슈의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은 그다지 높았다. 다만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개혁을 둘러싼 주요 이해당사자들(기업, 경제관료, 한국은행)만이 이 이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갈등을 드러낼 뿐이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주목과 관심이 낮은 이슈를 정치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에 따른 실익과 피해를 명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슈 프레이밍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이슈의 중요성을 높이는 이른바 이슈 혁신가(issue entrepreneurship)가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이러한 혁신가는 출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 개방 문제에서 시민사회가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시민사회 내부의 분열이었다. 세계화와 개방정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근본주의 파벌부터 개방의 현실적 불가피론을 펴는 현실주의파까지 다양한 집단이 진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였다. 이들

진보 진영이 내부적인 결속과 일관된 입장을 마련하기도 전에, 김영삼 정부의 신속한 세계화 드라이브는 자본시장 개방의 주요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결론 : 반응적 세계화에서 성찰적 세계화로

2008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차례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코펜하겐 세계 기후회의의 교착 등에서 보듯이, 지구촌은 금융위기, 미국 리더십의 불안정, G2(미국과 중국)의 부상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골격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1990년대의 1차 세계화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신장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전과 능력, 영감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다. 1차 세계화의 한계를 딛고 주체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반응적, 추종형 세계화를 넘어 성찰적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

성찰적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단순 추종의 세계화를 넘어 인식과 비전의 복합화를 이루어야 한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세계화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깥 세계의 변화하는 세계 표준을 따라 잡으려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이 같은 수동적인 인식을 넘어 인식과 비전의 복합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성찰적 세계화에 접근할 수 있다. 인식의 복합화는 '세계질서의 변동 - 한국의 위상과 전략 - 국내적 기반의 성격'이라는 세 차원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① 세계질서의 표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하고도 주의 깊은 관찰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②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세계표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상과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 ③ 물론 이때의 국가전략은 우리 안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먼저 세계질서의 변동부터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인 흐름은 구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유지되어 온 시장 중심의 철학은 크게 위축되고 다시 정부의 효율적인 개입과 역할이 당연시되는 개입주의 철학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종주국들에서도 위기의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파산의 위기에 몰린 금융기관들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그동안 세계표준으로 꼽히던 자유주의 경제는 사실상 퇴장한 셈이다. 심지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매우 높게 유지되는 중국의 경제모델이 일정한 매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에 따라서 한 편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베이징 컨센서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Ramo 2004).

지난 백년 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시장중심주의와 정부개입주의의 부침의 쌍곡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2008년 이후에는 시장주의의 퇴조가 뚜렷하고 정부개입주의의 재등장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개입주의의 구체적인 양상, 그리고 각국의 개입주의가 어떠한 국제질서를 창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상태인 셈이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전략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질서가 새로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 세계표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순한 세계화가 한국의 대외전략이었다면, 새로운 세계화는 세계표준과 한국의 세계화 전략 사이의 창의적인 긴장과 공존의 관계 위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1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한국이 규칙 수용자(rule-

follower)의 지위에 머물렀다면, 2기 세계화에서는 규칙 제정의 과정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G20 공동 의장국으로서 회의 의제를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강국(middle power)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의제 조율과 대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중강국으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발휘하는 최초의 시험대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세계질서는 정부 규제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지도력의 예측불가능성과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세력 간 관계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제한적이거나 규칙 제정자 그룹에 끼게 된 우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가목표와 전략을 개발해야만 한다.

정부 주도의 세계화를 넘어 사회와의 소통에 기반을 둔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1차 세계화가 미완으로 끝난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결핍이었다. 미래지향적인 성찰적 세계화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와 정책엘리트들이 대외 개방정책을 주도할 때에, 이러한 세계화는 경제중심주의적 사고와 단선적 세계화 수용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때에, 한편으로 대외전략의 대내적 정당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다채롭고도 유연함을 지향하는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미 상당 부분 세계화의 구조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며 — 물론 세계화의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이를 거부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 이들 스스로가 사회적, 문화적 세계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기도 하다. 주요 기업들의 활동과 문화,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구조와 내용에서 세계화는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은 이미 생산과 유통, 판매의 전략이나 거점, 전략의 구상과 실행, 인원의 충원과 훈련 등에서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기업 부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안의 문화적, 사회적 구성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세계화 과정에 있다. 일상생활의 소비, 이를 이끄는 광고,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주도적 행위자들은 이미 글로벌 대중문화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영화, 음악, 미술, 광고 시장에서 이미 한국사회는 대외적 흐름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수입국을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결과물과 콘텐츠를 해외에 내보내는 콘텐츠 발신국으로 올라서고 있다. 비단 동아시아의 대중문화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뉴욕, 파리, 런던, 동경과 동조화 과정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깊숙이 세계화 중인 시민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는 세계화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끌어 갈 에너지와 비전을 얻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준. 1997. “금융개방과 금융개혁 방향.” <계간 사상> 봄.
모종린 편. 《한국 경제개혁사례연구》.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박길성. 2008. “글로벌 스탠더드의 배반과 또 하나의 위기.” <현대사회와 문화> 27, 1.
박세일. 2010.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백광일·윤영관 편.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백창재. 1999. “국제금융의 세계화와 국가주권.” 백광일,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윤영관 편.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세계화추진위원회. 1998. 《세계화 백서》.
이영조. 1995. “세계화와 유럽소국의 대응.”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정진영 편. 서울 : 세종연구소.
이흥규·김병국. 2006. “경쟁시대의 정부역량.”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장훈·김병국·정진영 편.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장훈. 2002. “지연된 개혁과 부조화의 개혁.” 《한국 경제개혁사례연구》 모종린 편.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장훈·김병국·정진영 편. 200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정진영 편. 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한배호 편. 1996. 《세계화와 민주주의》. 서울 : 세종연구소.
- Cohen, Benjamin. 1996. “Phoenix Risen: The Resurrection of Global Finance.” *World Politics* 48, 2: 268-296.
- Goldstein, Morris. 1998. *Asian Financial Crisis: Causes, Cures and Systemic Implication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irst, Paul and Grahame Thomson. 1999. *Globalization in Question*. Oxford: Polity Press.
- Kim, Samuel ed. 2000. *Korea's Global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ugman, Paul. 2008.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New York: Norton.
- Ramo, Joshua Cooper. 2004. *Beijing Consensus*.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 Ruggie, John.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379-415.

Schiller, Robert. 2008.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 Martin. 2008. *Fixing Global Fina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